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2010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희망과대안」 토론회

일시 : 2010.1.12(화) 오후 2시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희망과대안

진행

□ 사회자 : 하승창 (희망과대안 상임운영위원)

14 : 10 주제 발표

2010 지방선거연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선거 의제

박순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달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14 : 50 토론자 발표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김제선 (대전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춘열 (고양 무지개연대 추진단장)

16 : 20 자유토론

17 : 00 마무리

※ 자료 구성

○ 2010 지방선거연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선거 의제

○ 희망과대안 연합정치 3대 원칙

2010 지방선거연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선거 의제

이 발표문은 박순성(참여연대)과 김달수(희망제작소)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임; 작성자들은 가치와 정책에 기반을 둔 선거연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과 선거 의제의 대강을 제시하려고 하였음

1. 2010년 지방선거의 의미와 선거연합의 필요성

○ 지역단위 의회·행정 권력의 민주화 및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

: 올해 6월의 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지역단위의 의회·행정 권력을 변화시키는 의미를 지닌 선거이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국적 차원에서 처음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보여주는 선거임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지역단위의 의회·행정 권력은 고착화되고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혁신과 민주화가 필요함
- 2010년 6월 지방선거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 출범 후 2년 반이 되어가는 시점에 실시되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지 2년이 막 지난 뒤에 실시되기 때문에, 현 정권 및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민주적 권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권력을 위임한 국민' 사이에 신뢰 또는 긴장이 적절한 형태의 선거제도를 통해 유지·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 차원의 지방선거가 지닌 정

치적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됨

- 특히 현재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실제로 유지되지 않고 있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한 시민사회의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매우 중요함
- 결국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 차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의제를 둘러싼 경쟁 구도보다는 오히려 중앙정치 차원의 '권력 독주 견제' 대 '국정 운영 안정'이라는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임

○ 한국 민주주의의 기능 장애를 극복할 세력 균형 회복

: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정치권의 세력 균형이 무너짐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는 전국 및 지역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권의 세력 균형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함

- 이명박 정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국민과의 소통 거부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의 권력 독점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음
-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일당 독식' 형태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의회나 행정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광역단위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별 소속 현황>

서울시: 한나라당 94(94%), 민주당 5, 민주노동당 1
경기도: 한나라당 98(92.5%), 민주당 12, 무소속 5, 민주노동당 1
인천광역시: 한나라당 32(97.0%), 민주당 1
경상남도: 한나라당 44(84.6%), 민주당 2, 무소속 4, 민주노동당 2
부산광역시: 한나라당 43(95.6%), 민주당 1, 민주노동당 1
울산광역시: 한나라당 15(78.9%), 민주노동당 4
경상북도: 한나라당 52(94.5%), 무소속 2, 민주당 1
대구광역시: 한나라당 28(96.6%), 민주당 1
전라남도: 민주당 47(94%), 민주노동당 2, 무소속 1
광주광역시: 민주당 17(94.4%), 무소속 1
전라북도: 민주당 35(94.6%), 민주노동당 1, 무소속 1
충청남도: 한나라당 20(52.6%), 자유선진당 14(36.8%), 민주당 2, 무소속 2
대전광역시: 한나라당 13(68.4%), 무소속 3, 민주당 2, 자유선진당 1
충청북도: 한나라당 29(93.5%), 민주당 2
강원도: 한나라당 33(84.6%), 무소속 3, 민주당 2, 민주노동당 1
제주도: 한나라당 21(58.3%), 민주당 9(25%), 무소속 5, 민주노동당 1

○ **중간 평가, 균형 회복,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의 선거연합**

: 이명박 정부 2년 반의 국정운영을 선거를 통해 평가하고 정치권 내부의 세력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권에 속하는 정당들 사이의 선거연합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치권 사이의 협력도 매우 중요함

- 국민들은 3대 위기를 가져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방식을 투표를 통해 확실히 비판하기를 원하며, 야권이 선거연합을 통해 대안세력을 만들어주기를 바람
- 세력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권에 속하는 개별 정당들이 독자적으로 불균형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음
- 야권에 속하는 정당들 사이의 선거연합은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세력결집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불신임을 받았던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줄 것임
-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협력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 줄 것임
- 정치권의 선거연합과 정치권-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는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사회 내 중도-진보 영역에서도 새로운 세력균형을 가져올 것이며, 또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선거연합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일당 권력독점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임

2. 선거연합의 5대 목표

○ 「희망과대안」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야권이 후보단일화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당의 권력독점 견제를 통한 여야 간 균형 확립(42.6%)’, ‘4대강사업 저지와 서민정책 강화(19.1%)’, ‘범민주개혁세력의 강화를 통한 진보적 정책실현(12.4%)’, ‘지방자치선거 승리를 통한 이명박정부 심판(11.7%)’ 등을 들고 있음

(1) 3대 위기를 가져온 정권에 대한 견제와 야권의 자기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생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를 가져온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야권 선거연합의 승리를 통해,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야권 및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임
- 야권 정당들이 국민대중·서민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면서 가치와 이념에서 나

타나는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야 함

(2) 2대 국정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 전선의 형성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 및 국가발전전략·국가재정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으며, 세종시 계획의 수정은 국토균형발전계획의 전체적 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정책의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국민적 반대 전선을 형성하여야 함

(3) 한국 사회경제정책의 편향성을 극복할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현 정부가 친기업·친부자·친재벌·친자본 및 반서민·반노동·반환경·반복지 사회경제정책을 펴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는 심해지고 서민들은 생활고와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사회경제정책의 편향성은 물질만능주의·시장지상주의·경쟁제일주의 등을 사회 전반에 퍼뜨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약화되고 있음

(4) 인간을 위한 교육 혁신과 협력교육 실천

- 사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에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정책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함
- 현재의 경쟁중심 교육정책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권은 실종되고 정신건강은 악화되고 있음
-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인사들을 선출해야 함

(5) 지방자치의 혁신과 풀뿌리민주주의의 강화

-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부정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중앙집중적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앙 주도의 행정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방자치의 후퇴를 막아낼 수 있어야 함
-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선거연합을 통해, 그리고 선거 승리 이후 시민참여 방식의 지방연립정부를 운영함으로써 현재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함

3. 2010 지방선거연합의 6대 방향

3.1. 국정운영의 3대 기초를 공유하는 선거연합

○ 현 단계 국민들의 희망

-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는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일자리 안정과 창출, 사회복지 및 서민지원 사업의 확대, 안정적 주거 공급 및 주민참여형 재건축·재개발, 서민과 청소년을 위한 공교육 실시, 식품 및 생활 안전 강화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초 1 : 국민대중과 서민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 반노동·반서민의 사회경제정책 때문에 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고용·생계는 불안정해졌음
- 특히 쌍용자동차사태와 용산사태에서 보듯이 정부가 친자본 정책을 폼에 따라, 노동자와 서민은 최소한의 국민적 권리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특권층 중심의 사회경제정책에 반대하면서 국민대중·서민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특히 일자리정책, 주거정책 및 교육정책을 펴기 위한 선거연합을 형성해야 함

○ 기초 2 : 사람과 환경에 투자하는 경제발전전략

- 4대강 사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를 완전히 토건경제로 전락시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형성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 것이며, 환경적 측면에서는 심각한 수질 오염과 환경 파괴를 가져올 것임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무분별한 토건사업에 기초하여 경제를 운영하려는 경제전략에 반대하면서, 사람과 환경에 투자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려는 선거연합을 형성해야 함

○ 기초 3 : 지역균형개발을 추구하는 국토개발전략

- 세종시 계획의 수정은 수도권 과잉개발 억제 및 혁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던 국토균형발전계획을 무산시키면서, 경제·정치적 차원에서 지역불균형 및 수도권 권력집중을 가져올 것임
- 현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에 반대하면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선거연합을 형성함

3.2. 지방자치의 3대 기초를 공유하는 선거연합

○ 현 단계 지방자치의 문제점

- **폐쇄적·독점적 지역정치구조의 고착화:** 지방권력의 일당 독점 구조로 견제와 균형의 구조 실종, 토착세력과 밀착한 중앙정당 일색의 정치구조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의 위기;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법적·제도적 족쇄로 중앙 종속성 강화 우려
-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종과 주민 없는 행정:** 투명행정·민관협력을 통한 상생과 협치의 정신 실종, 시민들로부터 유리된 일방통행식 정책결정·행정집행으로 행정의 주민친화성 퇴색, 시민단체 및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이나 역할 배제
- **부정부패와 구조적 비리의 만연:** 지역 개발사업 등에서 고질적·구조적 비리 상존, 민선4기 전국 230곳 기초자치단체장 중 92명이 임기 중 검찰에 기소되고, 전체 단체장의 14%에 해당하는 33명이 직위 상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 사직 또는 직위 상실(1995~98년 23명, 1998~2002년 59명, 2002~6년 7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
- **지방재정의 종속성과 위기:** 자주 재원의 지속적 감소, 종부세의 완화 등으로 지방재정의 파탄 위기, 재정의 중앙 종속성 강화(전국 기초지자체의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은 2조2천300억 원; 시·구 단위 1조2천829억원, 군 단위 9천471억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복지예산 축소, 지속적 부채 증가 우려(2008년 지자체 총부채 31조5539억원, 전년대비 4.4% 증가; 인천시 2조원, 33% 증가; 서울시 2조1천억원, 31.3% 증가; 경기도 4조원, 11.1% 증가)
-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토건행정의 한계:** 무분별한 공단개발로 미분양 공단 속출(전국 지방 공단의 미분양율 40~50%), 대규모 호화청사 건립, 중복투자식 도로건설 등 과도한 건설 예산의 집행으로 지역 복지예산, 사회적 일자리 등의 정채 또는 감소
- **지역경제의 침체와 일자리의 감소:** 외부의 대형 기업 유치를 위한 과도한 특혜, 난개발식 공단조성 등에 대규모 예산투자로 재정건전성과 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 붕괴, 지역 소기업의 창업의 위축, 대형마트 및 SSM 등의 유치·난립으로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의 자립성 위협과 내수순환형 경제구조의 붕괴

○ 기초 1 : 지역주권의 회복

- 최근 지역주권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제약하려는 다양한 시도 존재: 주민의 의견과 지역적 특수성·역사성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체계 개편, 주민소환제를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후퇴

- 이러한 시도를 극복하고 민주적 지방자치를 복원하여, 지역의 자립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역량과 구조적 토대를 마련함

○ 기조 2 : 시민행정의 실현

- 참여예산제, 시민창안제 등을 도입하고 민주적 지방자치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행정구조 혁파
- 시민이 행정의 주인으로 모든 정책과정과 예산편성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행정을 실현

○ 기조 3 : 생활자치의 강화

-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착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자립·창의의 마을만들기 지원
- 주민센터를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전환하는 등, 주민참여 구조와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 일상적 정책참여 및 행정 평가를 위한 제도 마련과, 시민사회의 지속적 참여와 감시 프로그램 제시

4. 선거연합의 5대 지방자치 의제

4.1. 시민 주도의 행정, 더 넓고 깊은 생활자치의 구현

- 광범위한 시민참여,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민관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로컬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시민행정을 구현
- 책임과 창의를 통한 공직 혁신, 전면적 정보공개와 투명·윤리행정을 통한 관료제 극복
- 공약평가 조례 제정 등 매니페스토의 전면 확대와 정착을 위한 전환점 마련

□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예시)

- ①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거버넌스 구축(시민정책협의체 상설화)
- ② 참여예산제, 시민정책제안제도의 확대로 정책과정에 광범위한 주민참여 보장
- ③ 주민행복지수 지표에 맞는 주민친화적 행정조직의 개편과 정책 개발
- ④ 개방형임용제 확대를 통한 지역 인재와 민간 전문가들의 행정 참여
- ⑤ <인사위원회>에 노조, 시민단체 등 비관그룹의 참여를 보장해 공공성 강화

- ⑥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방지와 청렴행정의 제도화
- ⑦ 타운미팅의 정례화, 민원실의 도심 이전 등을 통한 소통의 지역정치 구현
- ⑧ 정책실명제 확대 및 정책평가제(매니페스토) 실시로 책임행정 구현
- ⑨ 주민센터의 민주화와 주민주도성 회복을 통한 생활자치의 강화
- 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 정보공개

4.2. 안전한 도시, 생활연대를 통한 복지 공동체

- 폭력, 재해, 도시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
-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대행을 넘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복지정책

□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예시)

- ① 모든 재해와 장애물로부터 해방된 무재해·무장애도시 만들기
- ② 도시건축물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과 지원체계 마련
- ③ 로컬푸드 운동을 통한 지역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 ④ 전문직 은퇴자들의 지역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육성
- ⑤ 건설예산의 축소와 지방재정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상향
- ⑥ 노인이 편안한 도시 만들기(노인 인구수 대비 노인시설 확충)
- ⑦ 생활밀착형 주민 건강관리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 ⑧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창업·사회활동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 ⑨ 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국공립 보육시설 3배 늘이기)
- ⑩ 학교폭력, 아동 및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4.3. 내수순환과 자립을 위한 지역경제구조 혁신

- 공장 및 산업유치 등 외부 의존형 지역발전에서 지역의 내재적 자원 발굴을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확대
- 환경, 의료, 복지서비스 등 삶의 질 향상과 내수진작을 의한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제2창업, 업종전환 활성화

□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예시)

- ① 지역 소기업,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과 지원체계 마련
- ② 대형마트 제한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 ③ 産産연계를 통한 지역의 내수시장의 확대
- ④ 지역균형발전지수 공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 ⑤ 지역발전과 지역공헌형 기업 구조마련(기업의 지역공헌에 관한 조례 제정)
- ⑥ 창의적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금 조성
- ⑦ 청년실업자 및 퇴직자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창업전문재단 설립
- ⑧ 폐업자영업자, 비정규직의 재기를 지원하는 양질의 직업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
- ⑨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아동, 노인 돌봄 서비스 등)
- ⑩ 직장인들을 위한 공공 순환교육프로그램의 확대

4.4. 꿈과 희망, 미래를 나누는 지역사회

- 토목·건설 사업의 축소하고 문화, 미래세대, 사람을 키우는 지역사회
-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만나는 다문화도시 만들기
- 평등한 문화향유권의 보장과 복지 관점에서 생활체육 지원

□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예시)

- ① 초등학교 완전 무료급식(친환경 농산물)
- ② 대안학교 육성, 전일제 방과후 교실의 전면확대와 프로그램의 질 향상
- ③ 어린이도서관, 놀이도서관,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등 어린이 공공 문화기반 확대
- ④ 청소년 사회교육(인권, 성, 민주시민)의 적극적 지원
- ⑤ 문화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친화적 문화공간 혁신
- ⑥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공교육 활성화와 문화예술인 육성
- ⑦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의 생활체육과 문화활동 지원
- ⑧ 주민 및 청소년 문화예술동아리의 지원으로 지역문화 육성
- ⑨ 주민 문화교육, 마을 문화 사업의 지원
- ⑩ 시립예술단, 문화시설 등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운영의 민주화

4.5. 자연과 더 가까이, 에너지 자립을 향한 녹색혁신도시

- 공유 공간의 확대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도시계획(시민은 물론 철학자와 예술가의 참여 확대)
-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복지의 실현
-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마스터 플랜 제시

□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예시)

- ① 2012년까지 공공청사 사용에너지의 1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수급
- ② 저탄소 생태도시 실현과 기후보호도시 실행계획 제시
- ③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기금 마련
- ④ 주민참여형, 자원순환형 도시재생
- ⑤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의 확대
- ⑥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등 시민의 주거복지 강화
- ⑦ 도심 녹지, 하천 및 생태 공간의 복원과 확대
- ⑧ 도시의 휴과 자연친환경성을 살리는 도시농업의 지원
- ⑨ 대안교통수단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지역교통체계의 전면적 혁신
- ⑩ 편안하고 안전한 거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통한 보행공간의 혁신
- ⑪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계획과 공공 공간(시민광장)의 확대

5. 2010 지방선거연합을 위한 제언

- 국민 모두가 가장 바라는 다섯 가지 희망을 만들어 주는 선거연합을 실현하자
 - **일자리의 희망을!** 현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청년을 포함한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정적이고 사람이 존중 받는 일자리임
 - **국민대중·서민에게 희망을!** 국민대중과 서민은 경제적 불안과 삶의 질 악화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대중·서민을 위한 맞춤형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이 필요함
 - **지역에 희망을!** 경제·교육·정치·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중앙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역격차 심화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에 균형발전의 희망을 주어야 함; 주민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실현해야 함

- **교육의 희망을!** 사람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교육, 지역 차원에서 복지와 교육이 결합된 교육을 만들어가야 함
 - **환경의 희망을!** 지역 차원의 환경 문제 해결이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환경 문제 해결이 안전한 식생활부터 모든 차원의 인간 안보를 담보해 줄 수 있음
- **5대 희망을 위한 국민생활우선정치를 함께 실현하자**
- 생활정치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 생활로부터 분리된 이념 정치’, ‘서민 생활과 분리된 국민경제 및 기업사회’, ‘시민참여가 없는 관료 정치·행정’을 극복하고, 생활밀착형 가치정치·시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사회경제체제와 교육·환경·여성·지역 등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노선의 변화 없이는 생활정치가 단순히 구호로 그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면서 사회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 선거연합은 서민생활 안정과 공공선 추구를 최소한의 철학·가치로 내걸어야 함
- **정권 견제와 3대 위기 극복을 넘어서는 한국 사회발전의 중장기 전망을 공유하자**
- 현재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권위주의적 통치, 국민과의 소통 거부, 친기득권·친자본·친재벌 사회경제정책, 대북강경정책)과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한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조정과 사회의식 변화, 양극화 및 고용불안정화, 부동산·교육·의료의 공공성 약화)가 맞물려서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의 차이, 반MB와 반신자유주의의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견제를 해 나갈 수 있는 진보·개혁적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전파할 것인가**
-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는 가치·지향·노선·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 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정책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 모임이 공동으로 공개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착된 공동 정책기반을 만들어나감
 - 공동의 가치와 정책 방향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구체적인 공동 정책의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토론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공동으로 전파함

○ **2010 지방선거연합 이후의 과제**

- 선거연합에 기초한 선거승리 이후에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선거연합에 참여한 정당들과 시민사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공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향후 한국 사회의 정치개혁과 사회경제체제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임

연합정치의 3대 원칙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세 측면 모두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진전되어온 시장만능주의, 경제 및 사회 양극화와 공공성 약화, 그리고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온갖 사회병리적 현상의 심화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위기의 근저를 이루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기득권 위주의 사회경제정책, 대북강경정책 등에 기인하는 위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희망과대안」을 창립하여 좋은 정치를 위한 시민정치운동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희망과대안」의 창립 이후로도 현 정부는 ‘폭주’정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발생 1년이 다되어가도록 희생자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정부는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등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미디어법을 무리한 방법을 통하여 처리한 후에도 위법상태를 해소하려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몇몇 거대신문사에 종편채널 몰아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은 좋은 정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고 있다.

「희망과 대안」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일당 중심의 심각한 민주주의의 불균형 상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연합정치를 제안하였다.

이제 「희망과대안」은 올바른 정치연합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려고 한다.

원칙 1. 선거승리를 위한 포괄적 대단결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에 동의하고 연합정치에 찬동하는 모든 정당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구체적 연합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각 정당의 상이한 처지와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충

분히 감안된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또한 교육감 선거 등 정당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선거에서도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논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연합의 성과가 승자에게만 귀속되는 독식형 연합이 아니라 공동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양보와 희생의 정신을 기초로 한 연합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대동단결의 연합정치를 목표로 진지한 협의가 정당 사이에서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시작되어야 한다.

원칙 2. 진보개혁 가치와 정책에 근거한 연대

단순한 선거공학적 연합이나 ‘묻지마 식’의 연합을 지양하고, 가치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되어야 한다. 참여하는 각 정당이 세세한 형태의 정책까지를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합을 통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저지하고 도리어 확산·심화시키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인노릇을 하겠다는 정책기조와 가치관에 대한 동의가 최소한 전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가치와 정책에 기반을 둔 연합만이 그 취지가 선거 이후의 지방정부 운영에서도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방선거 이후의 여러 선거에도 그 정신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원칙 3. 시민이 참여하는 연합

연합정치가 단순히 정당 간, 특히 정당 지도부만의 동의에 의해 성립해서는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유권자의 동의를 받는 연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연합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좁게는 시민사회운동, 유권자 운동과의 공동기획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구체적인 성과의 창출과정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고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좋은 후보들의 진출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3대 원칙 위에 이루어진 연합정치는 현 정부의 일방독주형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정당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지율에 상응하는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 좋은 후보들의 진출도 촉진되어 풀뿌리민주주의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들 3대원칙의 실현을 위해 「희망과대안」은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자 한다.

첫째, 연합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희망과대안」은 정파성을 초월한 시민사회 인사들의 모임으로서 연합정치 담론의 국민적 확산을 위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고 자부한다. 단체 차원의 노력은 물론 회원 개인들의 인터뷰나 강연 등 여러 기회를 통하여 연합정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연합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나아가 연합정치의 실현을 각 정당에 촉구할 것이며,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연합의 매개가 될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확산작업에 나선다.

「희망과대안」 자체는 정책연구기관이 아니지만, 가치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공유하는 여러 연구집단과 세력들의 연계와 협동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인맥과 능력을 갖춘 모임이다. 「희망과대안」은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정책을 제안할 것이며, 민주적 선거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유권자 참여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복돋우는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연합의 성사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노력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희망과대안」 이외의 사회운동과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할 것이다.

넷째, 연합정치의 실제 성사를 위해 필요한 중재 또는 조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연합을 위한 작업의 기본적인 주체는 정당이다. 우리는 정당 간 대화와 협조가 진행되도록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희망과대안」의 비정파적 특성을 살려 중재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